

Prepared for : 차미연, 자생넷, 굿소사이어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분노의 실체: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2021. 10.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승연

-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2명
(주의: 통계 보정으로 2,000표본으로 분석하였으며, 보도/공표 시에는 조사 실 사례수 2012명으로 기재해야 함)
- 표본추출틀** ▶
 - 리서치앤리서치 패널 (2021년 7월 기준 약 14만명)
(온라인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자체 구축한 리서치 패널)
- 표본추출방법** ▶
 - 성/연령/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 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
- 통계보정** ▶
 -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림가중, 2021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응답률 및 표본오차** ▶
 - 35.8%
 - 95% 신뢰수준에 $\pm 2.19\%p$
- 조사기간** ▶
 - 2021년 8월 15일 12시~23시 59분
 - 2021년 8월 16일 00시~23시 59분
 - 2021년 8월 17일 00시~23시 59분
 - 2021년 8월 18일 00시~23시 59분
 - 2021년 8월 19일 00시~15시 00분
- 조사기관** ▶
 - (주)리서치앤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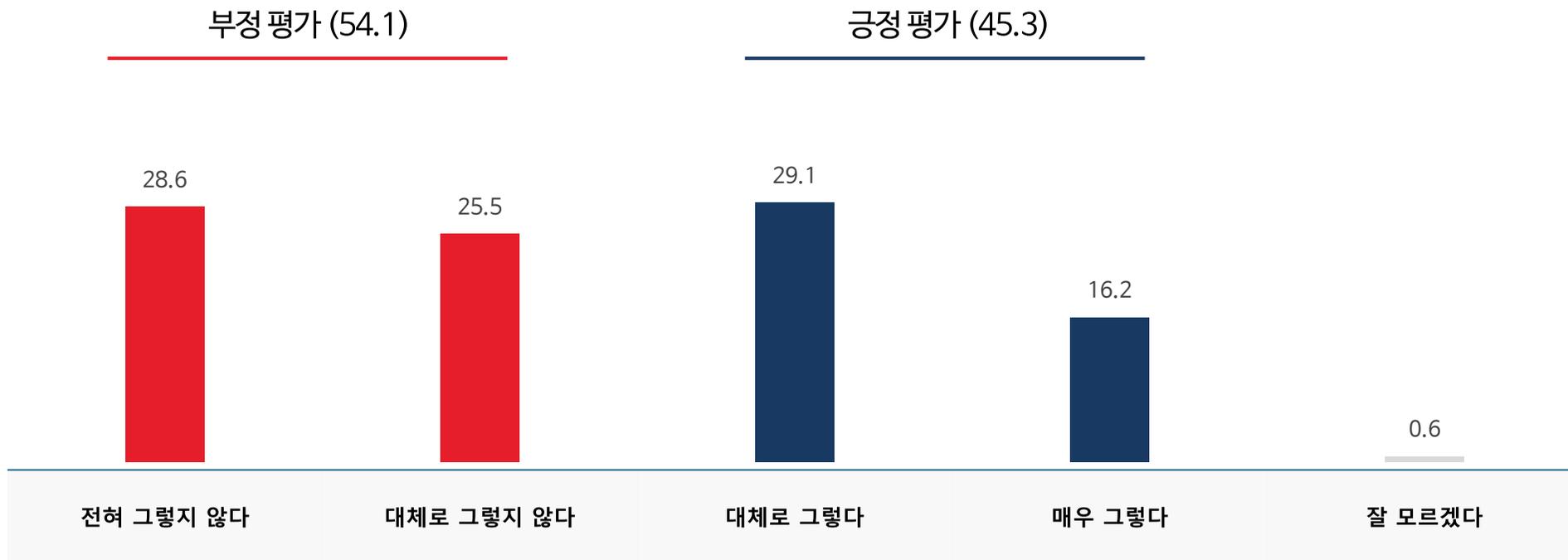
1. 국정운영 평가

1) 8월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 ▶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3% (매우 그렇다 16.2% + 대체로 그렇다 29.1%), 부정 평가는 54.1% (전혀 그렇지 않다 28.6%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5.5%)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8.8%p 높게 나타남
- ▶ 강한 긍정이 강한 부정보다 12.4%나 적게 나타남. 중립에 표한 응답자가 극히 적음. 작년은 53.3 : 44.6 이었음
- ▶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과 높은 상관관계 보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부정 비율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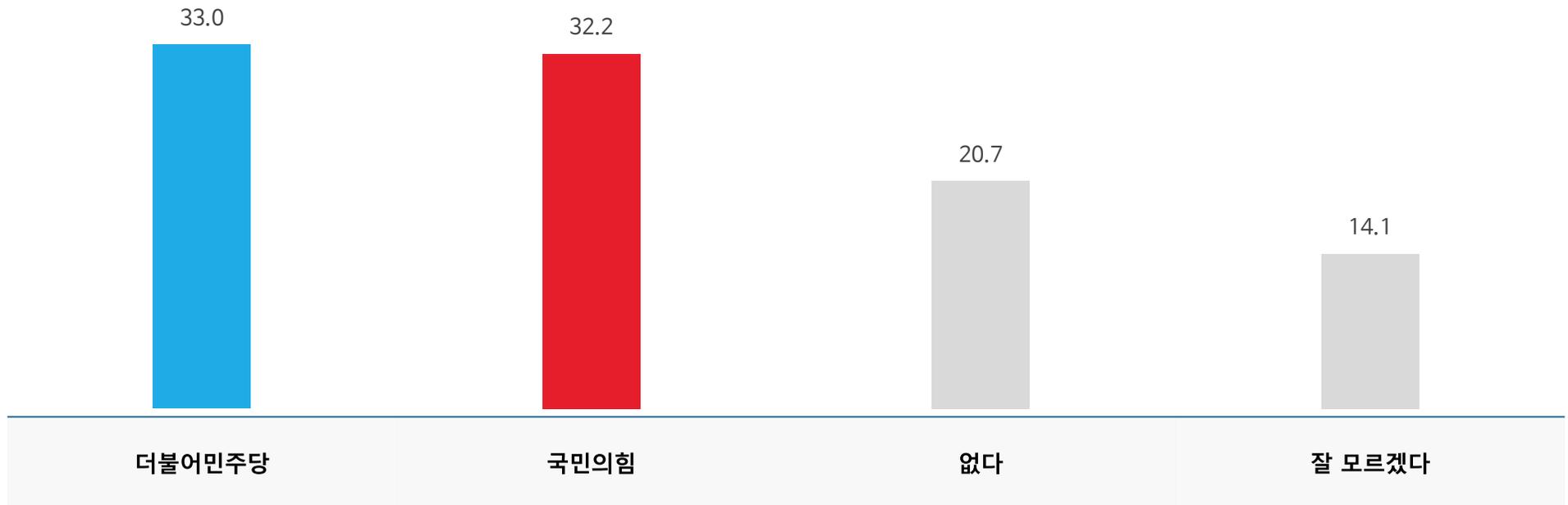


4. 미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 미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33.0%)과 국민의힘(32.2%)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없다 20.7%, 잘 모르겠다 14.1%임
- 조사 중간 집계 때 31.7 : 31.8 : 22.7 : 13.8 (+1.3, +0.4, -2.0, +0.3)에서 변했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아졌음.
- **군소정당을 제외했을 경우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41.4%가 국민의힘을 9.2%가 민주당을 지지함. 정의당 지지자도 24.1%가 국민의힘을 13%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 정의당의 민주당 불신이 상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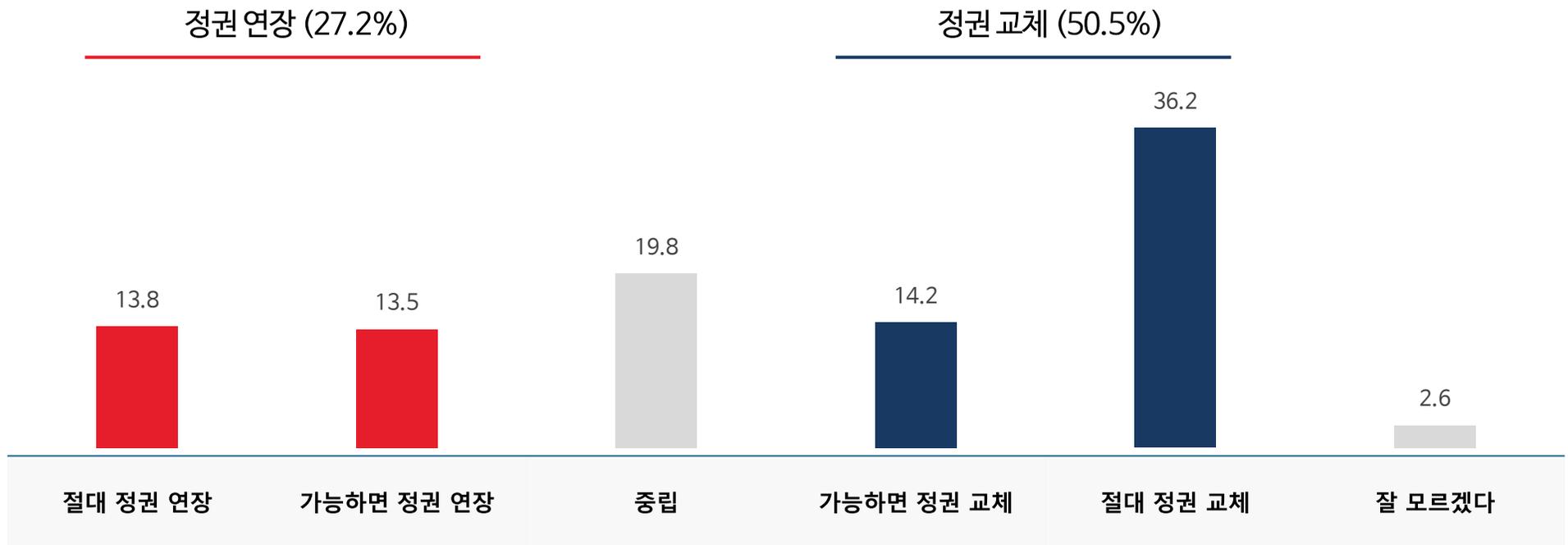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3. 정권교체 열망

-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0.5%로 정권이 연장 되어야 한다 27.2%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 절대정권교체가 절대정권연장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음. 무당층도 정권교체를 더 원함. 그런데 왜 윤석열 지지가 이재명보다 낮은가? 정권교체열망을 가진 50.5% 중 42%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14.2%는 이재명을 지지함. 정권연장을 바라는 27.2% 중 71.7%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단 2.6%만 윤석열을 지지함.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 중 3명이 윤석열을 지지할 때 1명은 이재명을 지지함.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도 정권교체라고 받아들이는 국민들 때문에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데도 이재명 지지자가 윤석열 지지자보다 높은 원인이 됨. 연령적으로 4050에서 정권연장에 대한 의견이, 60대 이상에서 강한 정권교체열망.
- 조사 중간 보다 정권연장은 0.7 높아졌고 정권교체는 0.6 낮아졌다.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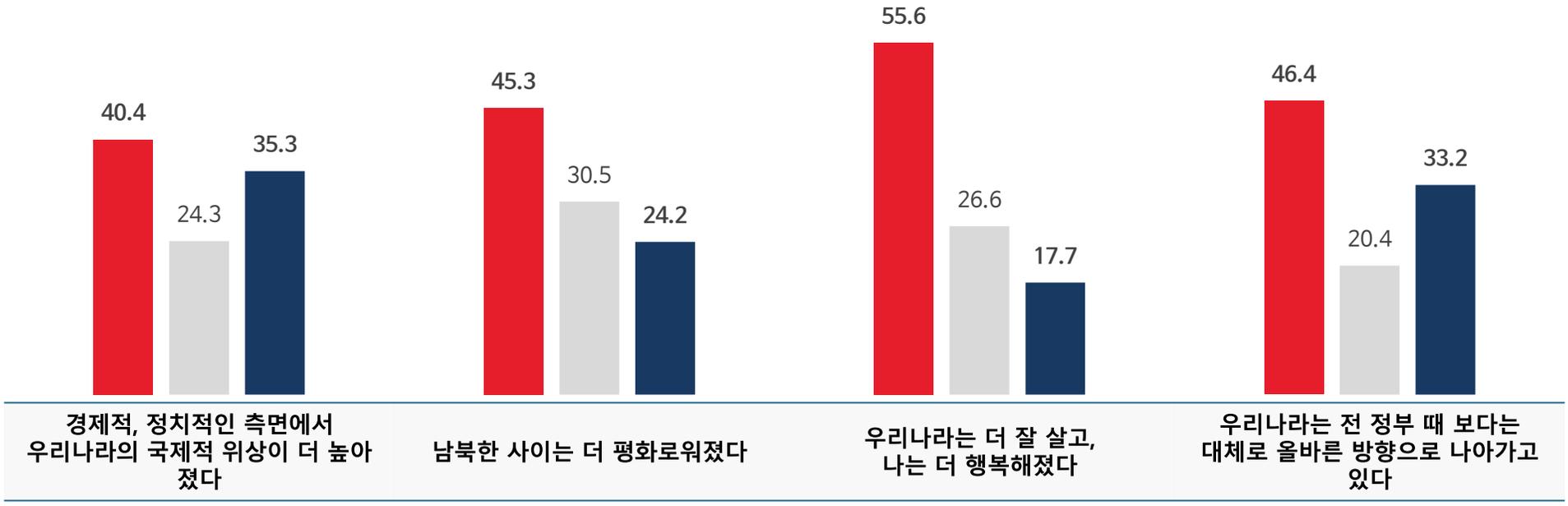


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즉 박근혜정부 때와 비교하였을 경우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물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이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지수가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낮아졌고, 남북한 사이는 더 위험해졌다고 느끼고 있고 전체적으로 박근혜정부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자신은 더 행복해졌다는 질문에 긍정의 답변은 17.7%인 반면 부정의 답변을 55.6%로 압도적인 차이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부정 ■ 보통 ■ 긍정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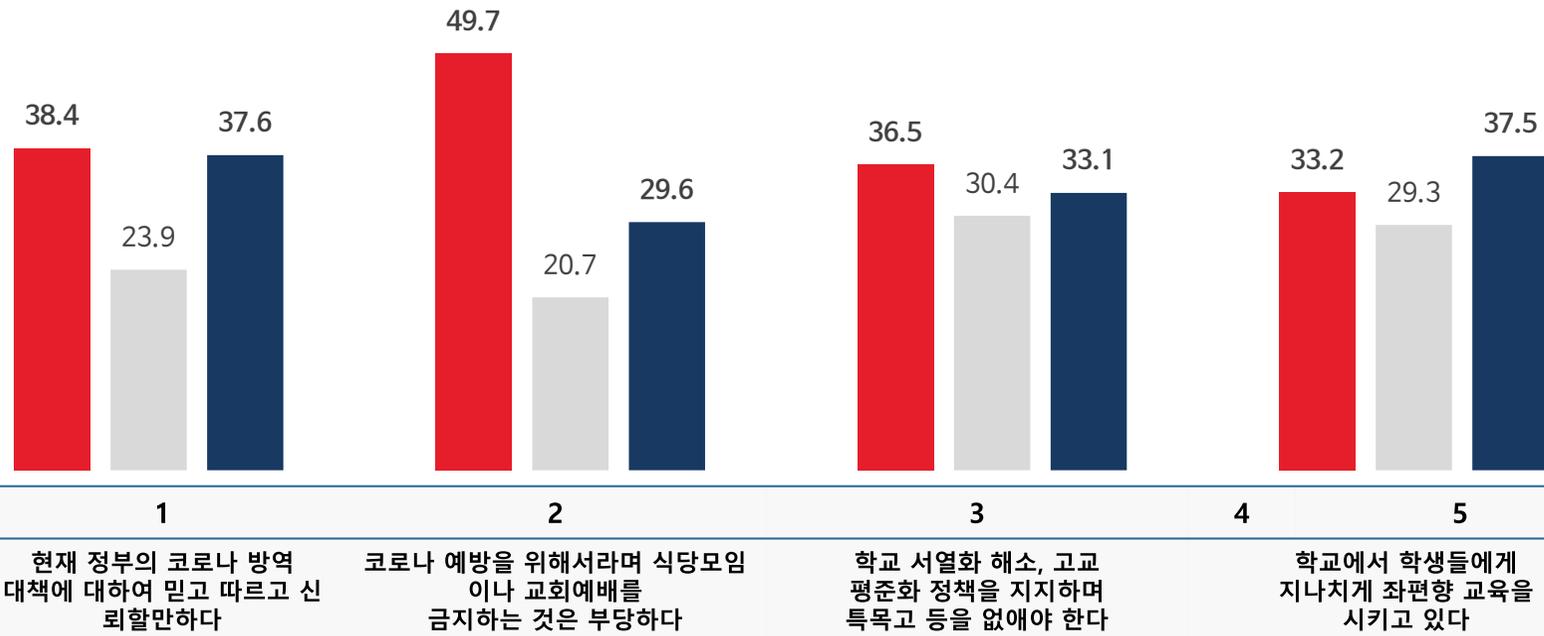


8.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 현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에 관하여 신뢰와 불신의 정도가 비슷함. 이는 정권교체열망과 높은 상관도(0.58)를 보임. 즉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방역대책에 불신을, 정권연장을 바라는 국민들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국민들이 49.7:29.6으로 더 많았다. 이에 대한 정권교체열망과의 상관도(0.28)는 일반적인 방역정책 신뢰(0.58)보다는 떨어짐.
- 특목고 폐지에 반대가 약간 높고(36.5:33.1), 좌편향교육에 대해서 37.5%가 인정하고 있고 33.2%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 모두 정권교체 열망과 0.433과 0.563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권교체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좌편향교육을 훨씬 더 걱정함

■ 부정 ■ 보통 ■ 긍정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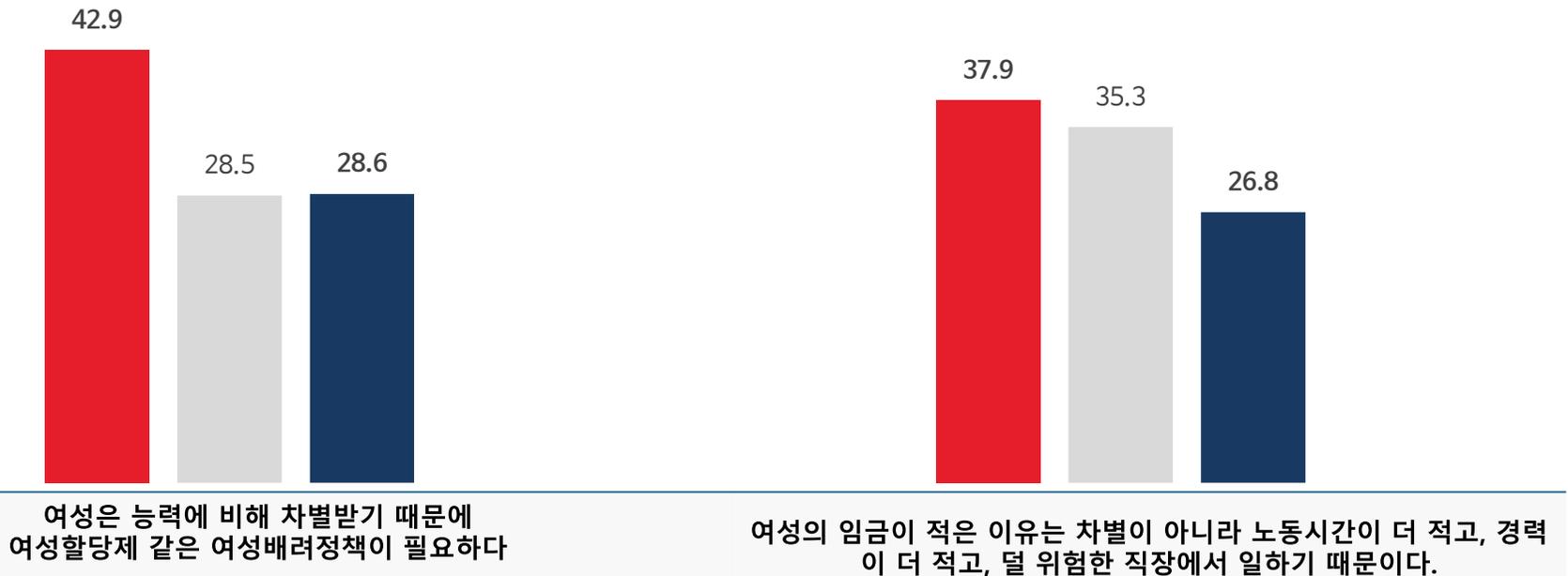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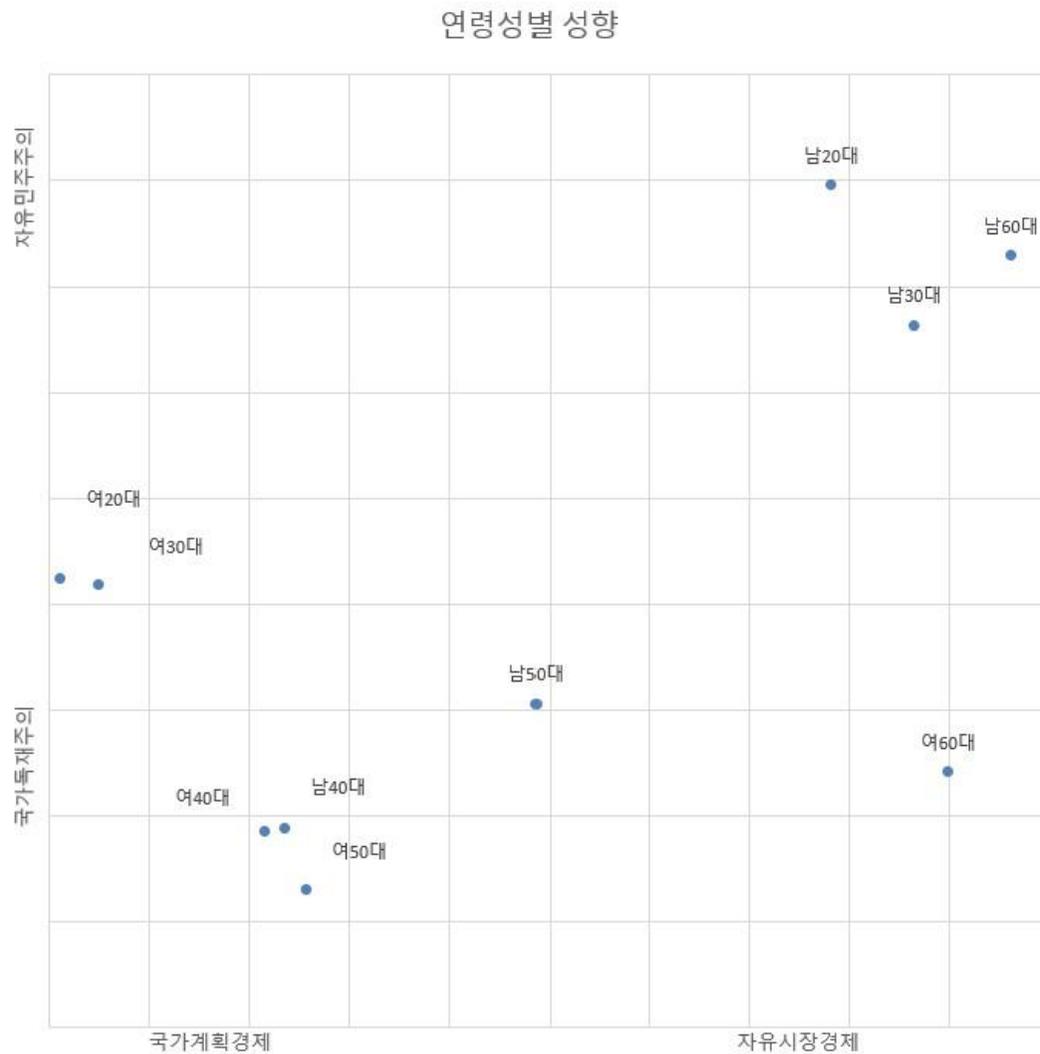
8. 여성정책 페미니즘과 관한 인식에 대한 의견

- 여성 배려정책과 여성 임금에 대하여 공정성이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성별 상관관계(0.19)는 크지 않고 문재인 지지도(0.2)와 정권교체 열망(0.16)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단, 2030에서만 남녀 성별의 차이가 크다. 임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성별과 상관관계는 0.29인데 **2030성별의 상관관계는 여성 임금에서 0.438, 여성할당제에서 0.382의 관계**를 보였다. 다른 연령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 수록 성별에서 차이가 적어진다. **2030에서는 여성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정권교체 열망과는 상관관계가 낮다(0.150과 0.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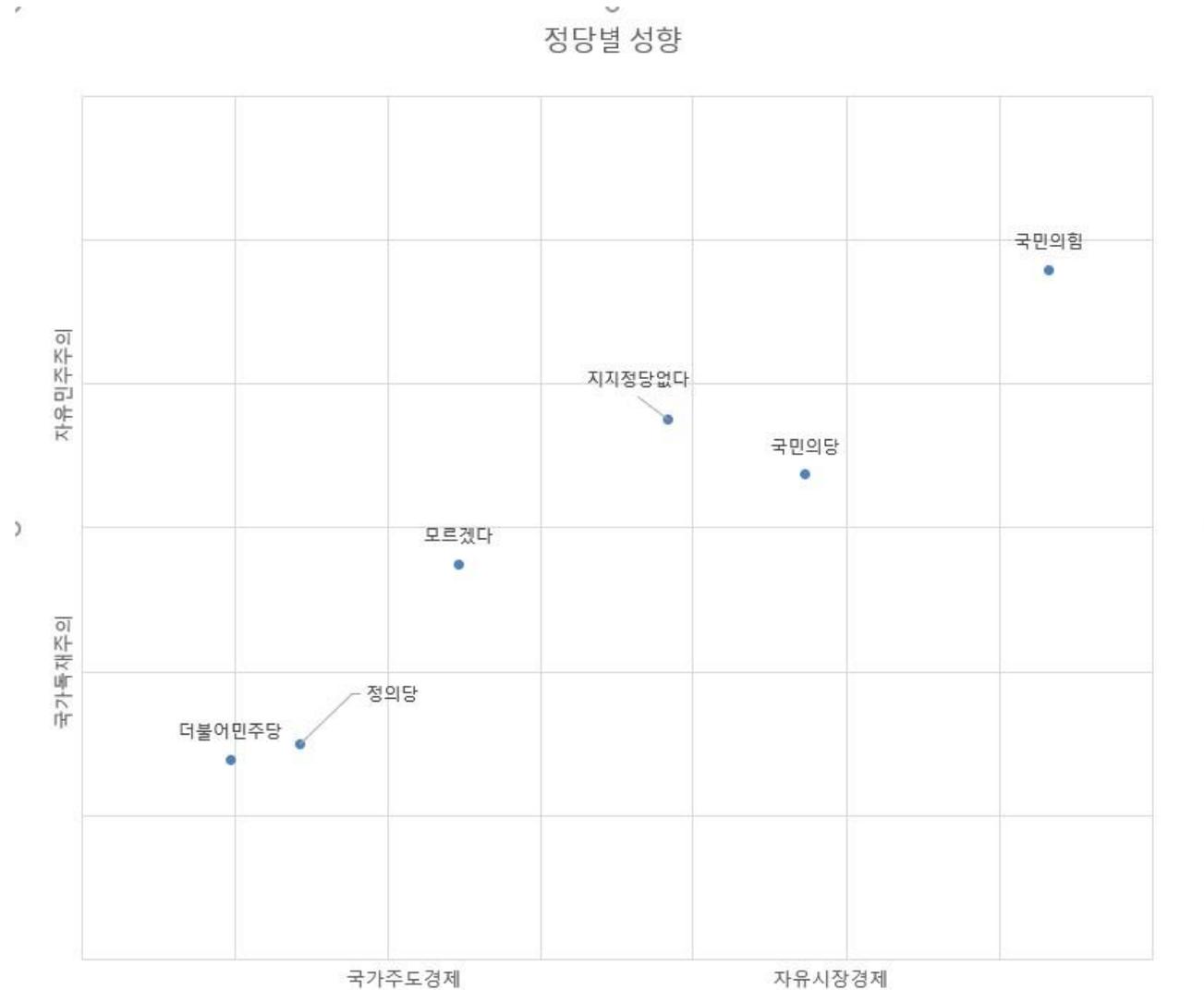
■ 부정 ■ 보통 ■ 긍정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정당별 성향(정치적, 경제적 상대적인 positi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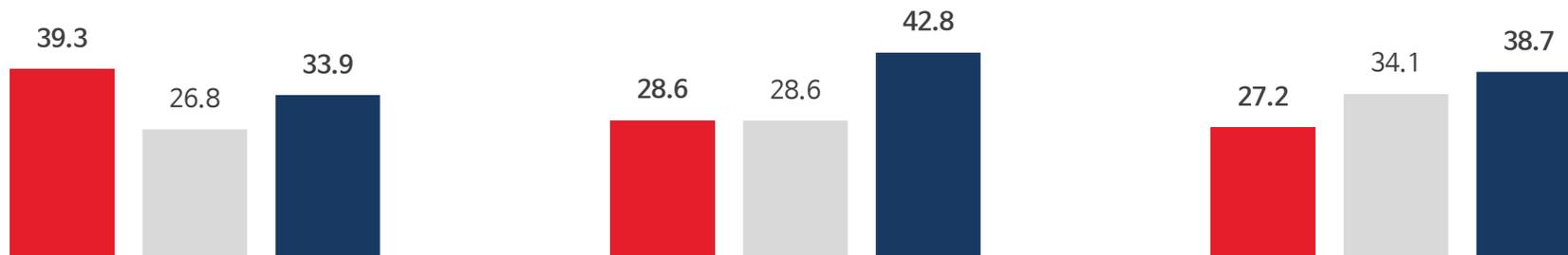


8.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세월호기념관에 대해 문재인지지도와 정권교체열망과 0.47, 0.48의 상관관계. 문재인지지도에 대한 상징적 의미

■ 부정 ■ 보통 ■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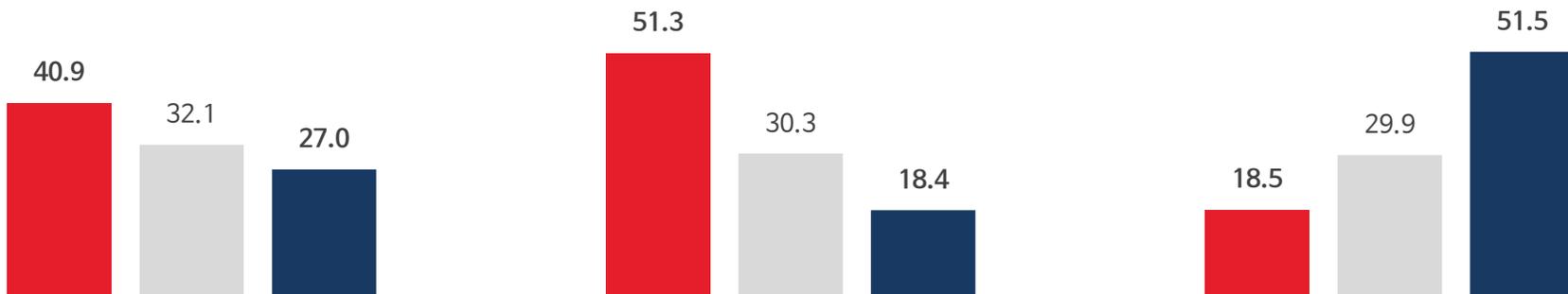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세월호 선체를 기념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통과를 반대한다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



5.18 희생자 후손들이 입시/취업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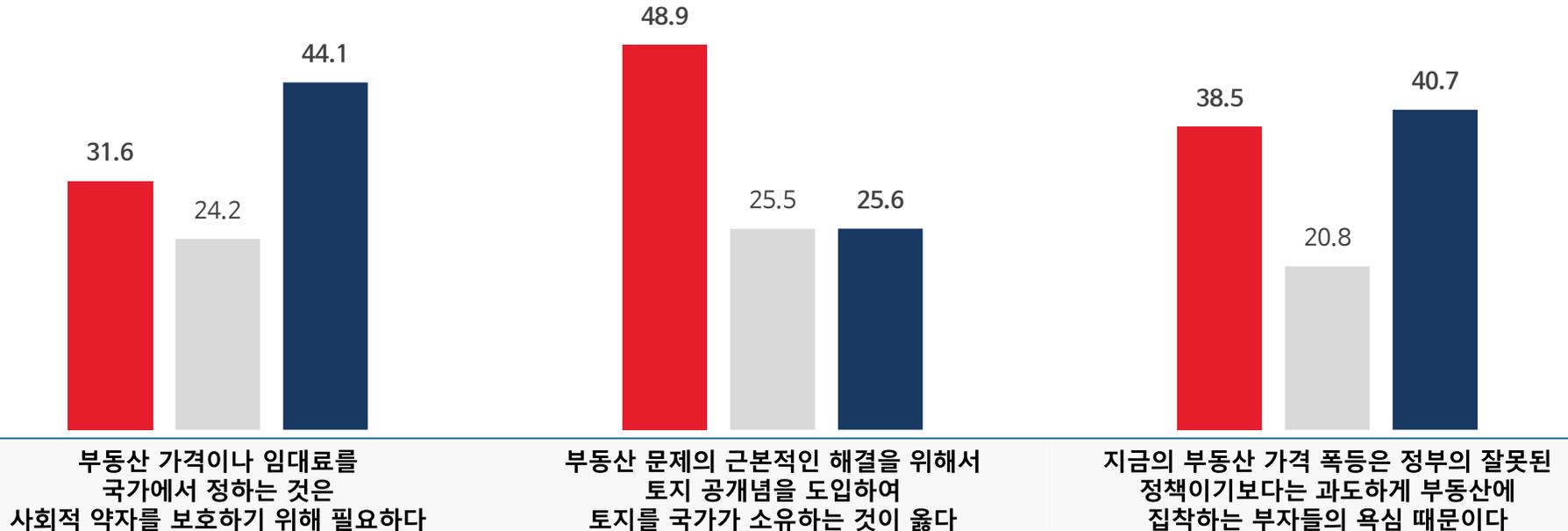
위안부나 5.18에 대해 법이 정하지 않은 의견 표명은 금지해야 한다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 부동산에 대한 각 의견 평가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44.1 : 31.6으로 찬성이 많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기보다는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착하는 부자들의 욕심 때문이다'는 질문에도 40.7 : 38.5로 긍정이 약간 높았다. 반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옳다'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48.9: 25.6으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 체제 관련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적이지만, 개인의 당면한 문제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좌파적이다. 책임을 부자들 탓으로 돌리는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40%나 되며 문재인 지지도와 상관도가 높고 정권교체 열망과는 0.49의 상관관계

■ 부정 ■ 보통 ■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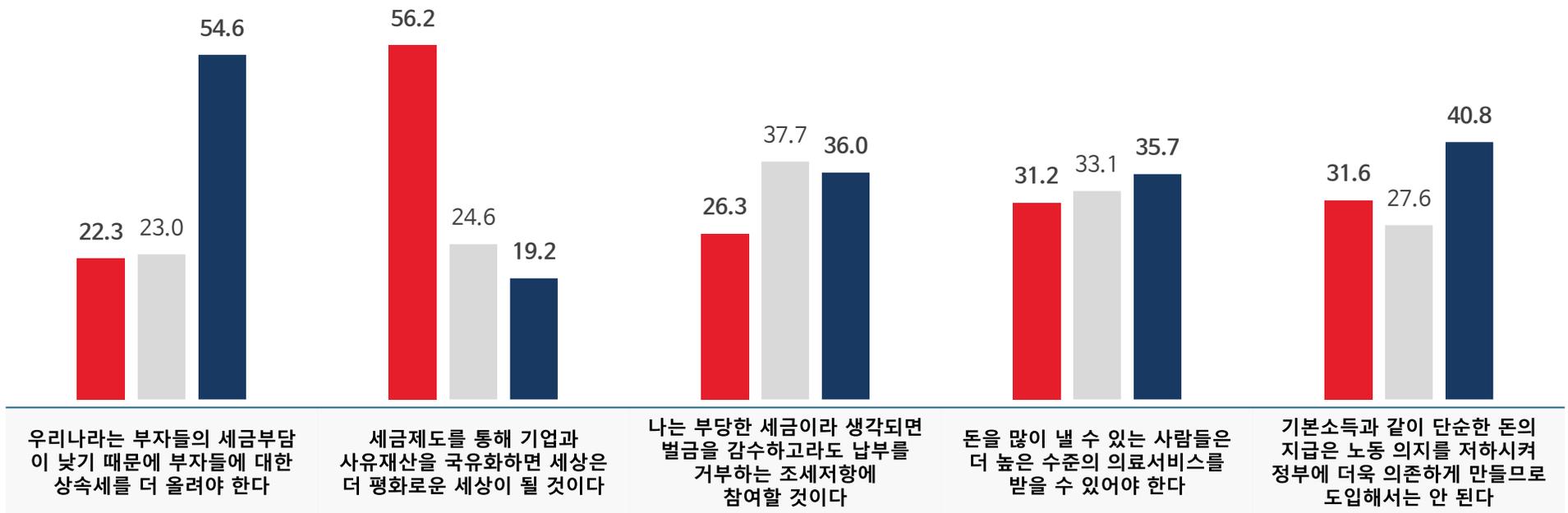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 세금에 대한 각 의견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에 대해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4.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금제도를 통해 기업과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면 세상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19.2%)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게 나타남. **역시 체제에 관한 질문에는 우파적으로, 부자에 대한 시기심과 개인의 이익에 관한 질문에는 좌파적으로 답함. 203060 남성이 우파적이고 2030여성, 50대, 호남에서 더 좌파적임.**
-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 질문에는 작년 14.9 : 64.8에서 현재 22.3 : 54.6으로 **차이가 줄어들**
- 기본소득에 관한 질문에도 작년 24.9 : 44.3에서 현재 31.6 : 40.8로 **차이가 줄어들. 1년 사이에 보수화됨**

■ 부정 ■ 보통 ■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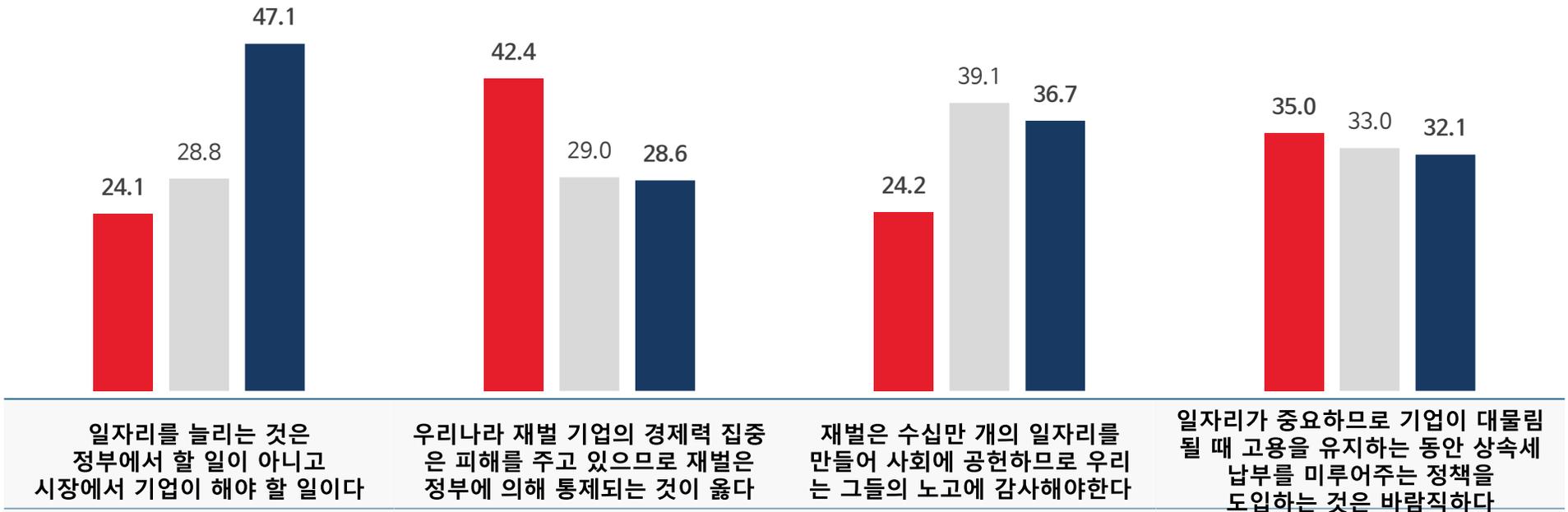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 기업에 대한 각 의견 평가에서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는 의견이 47.1%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재벌기업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반대가 많고 재벌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일자리와 연계하여 선진국가들과 같은 가업상속제도에 반대의견이 35%로 찬성의견 32.1%보다 높았다. 민주당의 공무원 숫자와 일자리 확대정책 그리고 무상복지 확충정책에는 42.9:28.6으로 반대가 많다.
- 시장과 기업 그리고 재벌에 대한 긍정적인 평, 친기업적 정서가 우세하다. 2030남성등은 더 친기업적이고 여성들은 반기업적인 성향임. 1년 전 조사와 비교하여 고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부정적인 태도가 크게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수화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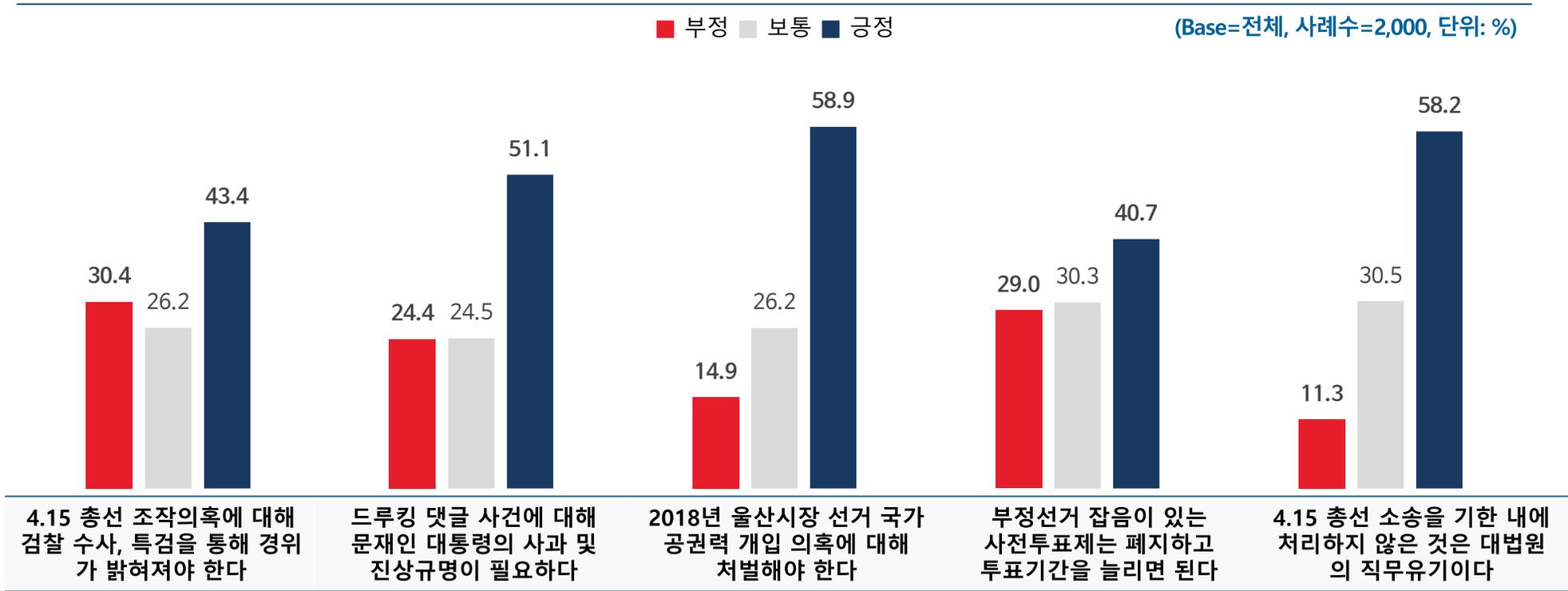
■ 부정 ■ 보통 ■ 긍정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11. 부정 선거와 관련된 의견

- 선거관련 이슈에 대한 각 의견 평가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국가 공권력 개입 의혹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58.9%), '4.15 총선 소송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이다'(58.2%)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한편, '부정선거 잡음이 있는 사전투표제는 폐지하고 투표기간을 늘리면 된다'(40.7%), '4.15 총선 조작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특검을 통해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43.4%)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은 편임
-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갖고 있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관련 문항에 대한 태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4.15부정선거 검찰조사	13.7	20.1	66.3
드루킹 댓글조작 진상규명	4.5	11.2	84.3
울산 시장선거 배후조사	3.3	12.1	84.6
사전선거 폐지	14.5	23.2	62.4
대법원 직무유기	4.7	19.1	76.2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관련 문항에 대한 태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4.15부정선거 검찰조사	50.8	24.5	24.7
드루킹 댓글조작 진상규명	51.7	26.6	21.8
울산 시장선거 배후조사	31.1	32.5	36.4
사전선거 폐지	47.2	28	24.8
대법원 직무유기	19.1	32.8	48.1

12. 정부여당의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

-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 수와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각종 무상복지 확충 정책에 찬성(28.6%)보다 반대(42.9%)가 더 많음.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35%로 위헌적 입법이라는 36.8에 근접하는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음.
- 20대 여성의 맹목적인 친여마인드 혹은 언론 자유에 관한 무관심이 보임. 문재인지지도와 0.38, 정권교체열망과 0.45의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법안의 옳고 그름보다 진영논리에 빠져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부정 ■ 보통 ■ 긍정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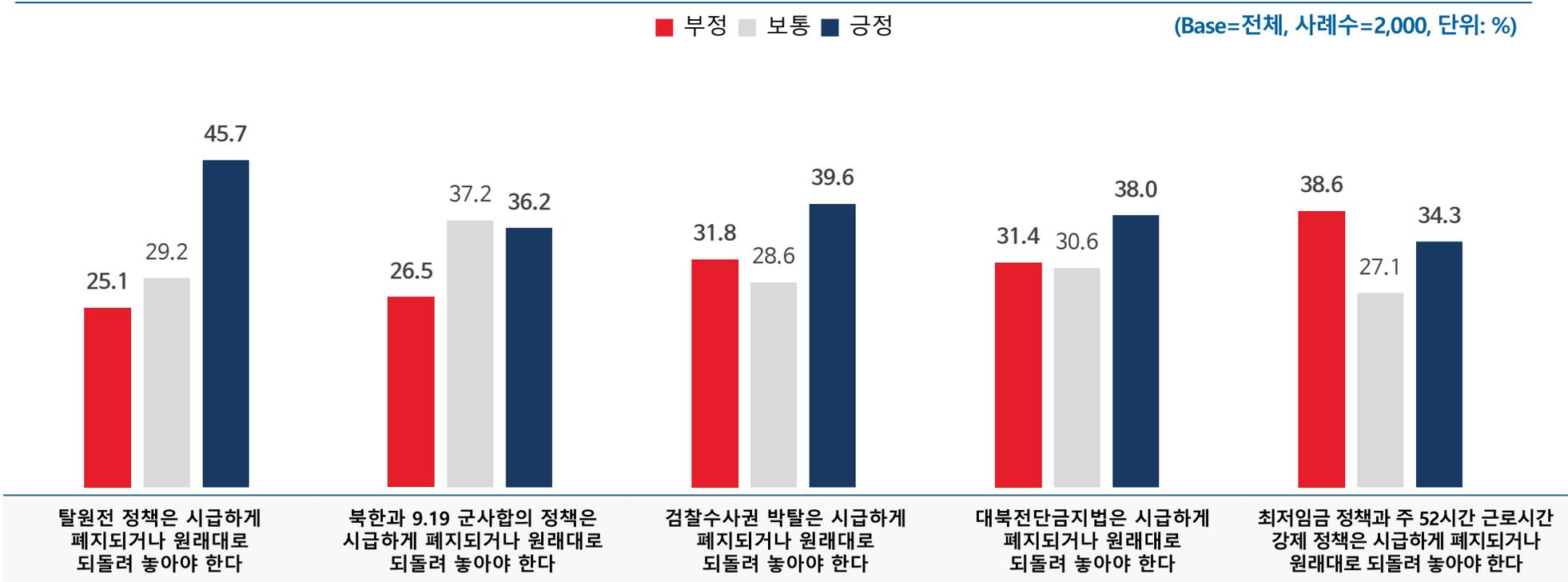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의 공무원 수와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각종 무상복지 확충 정책은 옳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다

13. 악법폐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

-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정책과 관련된 주장 중 '탈원전 정책은 시급하게 폐지되거나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45.7%)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검찰수사권 박탈' (39.6%), '대북전단금지법'(38.0%)는 시급하게 폐지되거나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등으로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 최저임금제와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측면에서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Prepared for : 차미연, 자생넷, 굿소사이어티

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은 무엇에 분노를 느끼는지 보이십니까?

Q & A